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생활과 윤리> 해설 및 심화 주제 분석

1. 실천 규범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 이해하기 정답 ②

[제시문 분석] (가)는 윤리학이 사회 변화와 기술 발달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 실천 규범 윤리학, (나)는 윤리학이 각 문화권의 다양한 도덕 관습을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역사적·문화적·인류학적 차원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 기술 윤리학이다.

[선지 분석] ① 실천 규범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신념과 관습을 단순한 사실들의 집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실천 규범 윤리학은 도덕을 단순히 문화적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차원의 구속력을 지니는 것이라고 본다. 도덕적 신념과 관습을 사실들의 집합으로 간주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에 대한 설명에 가깝다.

② 실천 규범 윤리학은 이론 규범 윤리학이 정립해 놓은 보편적 도덕 원리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덕 문제 해결에 적용하고자 하는 윤리학이다. 그래서 실천 규범 윤리학 역시 이론 규범 윤리학과 마찬가지로 어떤 도덕 원리가 타당한 것인지에 관심을 가진다.

③ 도덕 규칙이나 평가의 표준이 되는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은 규범 윤리학의 입장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이론 규범 윤리학이 강조할 내용이다. 기술 윤리학은 윤리학의 과제가 당위 판단의 기준이 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각 문화의 도덕 관습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라고 본다.

④ 도덕 언어의 의미와 도덕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윤리학의 주요 과제로 보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⑤ 기술 윤리학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규칙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기술 윤리학에게 도덕은 하나의 문화적 사실일 뿐, 절대적 구속력을 지니는 당위적 규범이 아니다.

2. 불교 사상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①

[제시문 분석] 제시문은 중생이 자신이 본래 갖추고 있는 부처의 품성, 즉 불성(佛性)을 깨닫고 해탈하여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는 불교 사상이다.

[선지 분석] ① 불교 사상에서는 모든 인간이 마음 안에 참된 진리, 즉 불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불교 사상에서는 자신의 본성이 곧 불성임을 깨닫기 위한 참선(參禪) 수행을 강조한다.

② 모든 분별적 사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좌망(坐忘)의 수양법을 제시한 것은 도가 사상가인 장자이다.

③ 하늘이 부여한 선한 본성을 보존하기 위해 거경(居敬)해야 한다는 것은 성선설의 입장에 있는 유가 사상가들의 주장이다.

④ 남이 보지 않는 혼자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게 언행을 삼가야 한다는 신

독(愼獨)은 유가에서 강조하는 수양 방법이다.
⑤ 도(道)에 따라 만물을 평등하기 바라보기 위해 심재(心齋)의 수양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도가 사상의 입장이다.

3. 칸트에 대한 매킨타이어의 비판 이해하기 정답 ⑤

[제시문 분석] 제시문의 화자는 인간의 정체성을 선험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면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한 덕 윤리 사상가이자 공동체주의 사상가인 매킨타이어이다. 매킨타이어는 인간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그 안에서 다양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게 된다고 보며 도덕성 역시 공동체의 역사적·문화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반면 칸트는 도덕성은 인간 제3의 외부 요인과는 무관하며 오직 인간의 실천 이성에 의해 정립되는 것이라고 본다.
[선지 분석] ① 칸트는 선한 성품에서 나온 행위가 곧 도덕적 행위임을 강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덕 윤리 사상가인 매킨타이어가 선한 성품에서 나온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간주했으며, 칸트는 의무의식에 따른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② 칸트는 인간이 실천 이성을 통해 보편적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칸트는 이성적 행위자인 개개인이 도덕 법칙의 수립자라고 본다. 각 개인은 자신이 지닌 실천 이성을 바탕으로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을 세우게 된다.
④ 칸트는 실천 이성에 의해 파악된 도덕 법칙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에게 당위적 구속력을 지닌다고 본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 법칙은 시공간을 초월한 보평타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⑤ 칸트가 도덕을 인간이 스스로 실천 이성을 통해 도출하는 것으로 본 데 반해 매킨타이어는 도덕이 공동체의 사회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4. 유전자 조작에 관한 논쟁 이해하기 정답 ①

[제시문 분석] (가)와 (나)는 유전자 조작에 관한 입장이다. (가)는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허용되지만, 자질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나)는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과 자질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지 분석] X: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은 미래 자녀의 동의를 중시하는 정도가 낮다.
Y: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은 조작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정도가 높다.
Z: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은 부모의 자유로운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정도가 높다.
따라서, 정답은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①이다.

5. 가족 윤리에 대한 유가의 관점 이해하기 정답 ④

[제시문 분석] 제시문은 유가 사상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로 제시하는 오륜(五倫) 중 부부유별(夫婦有別),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가에서 강조하는 오륜에는 이 세 가지에 더해 부부간의 도리인 부부유별(夫婦有別, 부부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함)과 상경여빈(相敬如賓,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과 같이 해야 함)이 더 있다.

[선지 분석]

ㄱ. 유가에서는 부부의 도리가 모든 예의 근본이라고 본다. 제시문에서도 남녀의 구별이 있으니 부부의 도리가 세워지고, 부부의 도리가 있으니 부자의 친근함이 세워지며, 부자의 친근함이 있으니 군신의 정당함이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ㄴ. 유가에서는 부부가 친밀한 사이이지만 서로 손님을 대하듯 공경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유가에서 강조하는 상경여빈의 자세이다.

ㄷ. 유가 사상에서는 부부 관계가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라고 본다. 부부는 서로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유가에서 강조하는 바이다.

ㄹ. 유가에서는 부부가 각자의 역할에 분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유가에서 강조하는 부부유별이다.

6. 예술에 대한 칸트와 플라톤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③

[제시문 분석] 갑은 미(美)와 선(善)의 형식이 유사하므로, 미가 도덕성의 상징이 된다고 본 칸트이다. 칸트에 따르면 미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은 모두 이기적 욕구를 넘어선 보편성의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을은 예술이 사람들의 올바른 품성 함양을 위한 모범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예술은 도덕적 이상을 모방하고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의 영혼을 정화할 수 있다.

[선지 분석] ① 칸트는 예술 작품의 가치를 작품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칸트는 미적인 것에 대한 판단은 도덕적 판단과 마찬가지로 이기적 욕구를 넘어선 보편성의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미적인 것에 대한 판단은 일체의 이해관심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③ 플라톤은 예술 작품은 올바른 품성 함양을 위한 '모범'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플라톤이 볼 때 예술의 역할은 사람들의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 '도덕적 이상'을 모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 작품은 아름다움을 그대로 표현하되 추함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④ 플라톤은 예술 작품의 미적 가치가 질서 있는 리듬과 운율 안에, 즉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플라톤의 관점에서 무질서한 리듬과 운율 안에서는 미적 가치가 존재할 수 없다.

⑤ 칸트는 미가 도덕성의 상징이 되므로, 미를 추구함으로써 도덕성이 촉진될 수 있다고 보았다. 플라톤은 미를 담고 있는 예술 작품의 존재 이유 자체가 도덕성 함양이라고 보았다.

7. 롤스의 시민 불복종 사상 이해하기 정답 ②

[제시문 분석] 제시문은 자연적 의무의 차원에서 시민 불복종의 의무를 주장하는 롤스이다.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는 누구든지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자연적 의무를 지닌다고 보았는데, 이 자연적 의무에서 준법 의무와 시민 불복종 의무가 도출된다고 본다. 법이 정의롭거나 부정의하더라도 그 부정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는 것이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자연적 의무에 부합한다. 그러나 만일 어떤 법이 심각하게 부정의하다면 이에 불복종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적 의무에 부합하게 된다. 롤스는 법률이나 제도, 정책의 부정의 여부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정의의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정의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률이나 제도, 정책에 대해 시민 불복종을 전개할 때에도 처벌 감수·비폭력·공개 등 일정한 조건들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선지 분석] ①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의 목적은 사회 정의의 실현이지 다수의 이익 증진이 아니다.

[심화 주제 분석] 2021학년도 수능완성 해설지 51p "ㄹ. 시민 불복종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저항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소로와 롤스 모두 동의할 내용이다."와 ① 선지의 양립 가능성

② 롤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법률이나 정책, 제도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는데, 공직을 맡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은 곧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보장하는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이다. 롤스가 정의의 원칙 중 제1 원칙의 내용에서 제시하는 '기본적 자유'에는 사유 재산권과 시민권이 있는데, 이중 시민권에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선거권의 자유, 피선거권의 자유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심화 주제 분석] 롤스의 기본적 자유, 공직을 맡을 자유

② 선지를 다시 한번 보자. "공직을 맡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롤스의 시민 불복종 이론에서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나 제도, 정책은 오직 정의의 원칙 중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들로 제한된다. 차등의 원칙에 대한 위반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선지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공직을 맡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거나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위반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둘 중 무엇일까? 이 물음은 곧 공직을 맡을 권리가 기본적 권리(자유)인지에 대한 물음으로 연결된다. 꽤 많은 사람들이 ② 선지를 해설하면서 '기회균등의 원칙'을 이야기했다. '공직을 맡을 권리에 대한 침해'는 기회균등의 원칙보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침해로 보는 편이 더욱 타당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중대한 것은 기본적 자유들이 이런 자유들에 대한 목록으로 주어진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이 정치적 자유(투표의 자유와 **공직을 가질 자유**)와 언론과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심리적 억압과 신체적 폭행 및 절단을 포함하는 인신의 자유(인신의 온전성),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와 법의 지배라는 개념이 규정하는 이유 없이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이와 같은 자유들은 제1 원칙에 의거해서 평등해야 한다. **-롤스, 『정의론』**

롤스는 공직을 맡을 자유(권리)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의해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는 기본적 자유(권리)라고 말하고 있다. 롤스가 열거한 기본적 자유의 목록 중 사유 재산권은 이미 2020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바 있다. 공직을 맡을 자유와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사유 재산권) 외에도 롤스가 기본적 자유의 목록으로 제시한 내용들을 여러 번 읽어 익숙해지도록 하자.

③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그 자체로 사회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저항 행위이기 때문이다.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오히려 체제의 안정성에 기여한다.

④ 롤스의 입장에서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근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다.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만 가능한데,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헌법은 정의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롤스의 시민 불복종 이론에서 정의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이자 시민 불복종 여부의 판단 기준이지, 시민 불복종의 저항 대상이 아니다.

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모든 부정의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는 부정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법률은 준수하는 편이 낫다고 보았고,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심각한 부정의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다.

[심화 주제 분석] 자연적 의무에 대한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

⑤ 선지를 다시 한번 보자.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어떠한 부정의에도 저항할 것을 합의한다."

롤스가 자신의 시민 불복종 이론에서 법률이나 제도, 정부 정책이 부정의하다 하더라도 그 부정의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그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음은 거의 모든 수험생이 알고 있는 기본적 개념이므로 위의 선지에 대한 정오 판단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해당 선지를 해설하는 데 있어서 롤스가 심각하지 않은 부정의에 복종할 의무가 있음을 언급했다는 개념을 가져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느낀 상위권 수험생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수험생들은 '합의'라는 단어에 주목했을 것이다. '롤스가 시민 불복종을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의 차원에서 파악했는가?' 하는 물음을 가지고 만일 선지가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심각한 부정의에 저항할 것을 합의한다.**"였다면 선지의 정오 판단을 어떻게 해야 했을지 고민한 수험생들은 아주 바람직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 롤스가 심각한 부정의에 저항해야 한다고 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었을 수 있다.

롤스가 제시하는 시민 불복종 의무는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자연적 의무에서

파생된 것이다. 자연적 의무는 준법 의무와 시민 불복종 의무를 파생시킨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의 선지를 공부하면서 자연적 의무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것인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 대상은 '정의의 원칙' 정도로만 가르쳐져 왔기 때문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기본적인 자연적 의무는 정의의 의무이다. 이 의무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현행 제도를 우리가 지지하고 따를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또한 적어도 우리가 지나치게 희생하지 않아도 가능한 경우에는 아직 확립되지 못한 정의로운 체제를 세워 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한다. 따라서 만일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의롭거나 혹은 그 상황에서 기대하는 것이 합당할 만큼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의롭거나 혹은 그 상황에서 기대하는 것이 합당할 만큼 정의로운 경우에 모든 사람은 약속이나 혹은 다른 방식의 자발적 행위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제도의 구속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연적 의무의 원칙들은 계약적 관점으로부터 도출되므로 그것이 적용되기 위해서 공공연한 또는 암묵적 합의나 자발적인 행위를 전제하지 않는다. 제도에 대한 원칙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원칙들도 원초적 입장에서 인정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가정적인 합의의 결과로 이해된다.**

-롤스, 『정의론』

롤스는 자신의 대표 저서인 『정의론』에서 자연적 의무, 즉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원칙이 제도에 대한 원칙, 즉 정의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계약적 관점, 다시 말해 가상 합의의 관점에서 정당화된다고 말하고 있다. 정의의 원칙뿐 아니라 자연적 의무 역시 가상적 상황, 즉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자.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다루는 내용은 자연적 의무에 대한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 개념이 7번 문항의 제시문에도 등장해 있기 때문이다. 수능에 선지로 변형되어 출제되어도 당황하지 말기를!

(…) **당사자들은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정당한 시민 불복종을 규정하는 조건들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롤스,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8. 기술에 관한 야스퍼스와 하이데거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①

[제시문 분석] 갑은 기술이 인간과는 독립된 그 자체의 발전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저 가치 중립적 수단일 뿐이라고 보는 야스퍼스, 을은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할 때 기술에 무방비 상태로 내맡겨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기술의 부정적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는 하이데거이다.

[선지 분석] ① 야스퍼스는 긍정, 하이데거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야스퍼스는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즉 사실에 관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기술이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② 야스퍼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야스퍼스는 기술 그 자체는 지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기술은 그것이 쓰이는 목적에 따라 다르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기술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인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는 없다.
③ 야스퍼스와 하이데거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야스퍼스는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만, 기술은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의지에 의해 선을 낳을 수도, 악을 낳을 수도 있다고 본다. 하이데거는 기술의 부정적 영향을 경계하며 그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④ 야스퍼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야스퍼스는 기술을 가치 중립적 사실의 관점에서 파악하기 때문이다.
⑤ 야스퍼스와 하이데거가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야스퍼스는 기술이 그것이 사용되는 목적에 대한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술 사용의 목적은 인간의 의지와 관련된 것으로 인간의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하이데거 역시 잘못된 가치 판단에 의해 기술이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한 사상가이다.

9. 윤리적 소비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③

[제시문 분석] 칼럼은 필자는 단순히 개인적 만족과 여행 비용의 효율성만을 추구하던 기존의 여행 관점에서 벗어나 여행지에 도움을 주고 현지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여행을 지향하는 공정 여행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 소비의 관점을 넘어서는 윤리적 소비의 관점을 지향한다.
[선지 분석] ①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고려하는 여행은 공정 여행이다.
② 여행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여행은 공정 여행이다.
③ 사회적 책임보다 비용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여행은 공정 여행이 개인적 만족과 비용의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기존의 여행이다.
④ 개인적 선호만이 아니라 공공의 가치도 중시하는 여행은 공정 여행이다.
⑤ 여행자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도 배려하는 여행은 공정 여행이다.

10. 데카르트, 레건, 레오폴드의 환경 윤리 이해하기 정답 ③

[제시문 분석] 갑은 영혼과 육체라는 두 가지 실체의 존재를 상정한 후 인간을 영혼와 육체가 결합한 존재로, 동물을 육체만을 지닌 존재로 파악한 인간 중심주의자 데카르트, 을은 일부 포유동물을 삶의 주체로 파악하며 칸트 의무론의 인격 존엄성 개념을 삶의 주체 개념으로 확장하여 계승한 동물 중심주의자 레건, 병은 무생물과 생태계 자체까지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대지의 이용을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심미적·윤리적 관점으로까지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 생태 중심주의자 레오폴드이다.
[선지 분석] ㄱ. 동물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본 사상가는 데카르트과 레오폴드이다. 데카르트는 동물은 영혼이 없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동물을 인간의 필요에 맞게 마음껏 이용해도 좋은 것은 물론 함부로 학대하는 것 또한 도덕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 레오폴드는 동물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 것은 맞지만, 생태계 전체의 조화를 위해 개별 개체를 희생시킬 수도 있다고 보았

다. 반면 레건은 의무론의 입장에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였기 때문에 동물을 자원으로 대하는 것, 즉 동물을 단순히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심화 주제 분석] 동물 실험 등 동물 이용에 관한 레건의 관점

> 동물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레건의 입장은 어떨까?
>
> 레건이 의무론의 차원에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였음은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개념이다. 그는 칸트의 의무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였는데 그 비판의 내용은 칸트의 '인격' 개념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레건은 칸트의 인격 개념을 삶의 주체 개념으로 확장하여 인격이 없더라도 삶의 주체인 동물이라면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
> 이러한 맥락에서 동물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레건의 입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칸트가 인간을 자원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을지 생각해 보면 된다.
>
>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를 위해 동물을 먹을 수 있고, 외과수술에 의해 조작될 수 있으며, 스포츠나 돈을 위해 사냥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즉 동물을 우리의 자원으로 보는 것을 허용하는 우리의 체제다. **-레건, 『동물의 권리』**
>
> 따라서 레건은 동물 실험에 대한 조건부 허용론의 입장에 있는 싱어와 달리, 동물 실험에 대해 절대적 폐지론의 입장에 있다. **레건은 동물을 자원으로 간주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우리의 체제가 잘못되었음을 비판하고 있다.**

ㄴ. 사유 능력 여부로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탈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들은 사유 능력을 지녔는지의 여부로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오직 이성적 사유 능력을 지닌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본다. 이에 반해 탈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들은 쾌고 감수 능력(싱어), 삶의 주체인지의 여부(레건), 생명의 여부(테일러, 슈바이처), 생태계의 구성원인지의 여부(레오폴드, 네스) 등 다른 기준을 통해 존재의 도덕적 지위 여부를 결정한다.

ㄷ. 살아 있는 모든 개체가 도덕적 고려 대상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은 생태 중심주의 사상가인 레오폴드만이 동의할 주장이다. "도덕적 고려 대상인 공동체"라는 안긴 문장의 진술에서 생명 공동체 그 자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여기는 진술임을 알 수 있다.

ㄹ. 생명에 대한 권리, 즉 생명권이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탈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할 주장이다.

11.

12. 타 문화에 대한 샐러드 볼 모형과 국수 대접 모형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③

[제시문 분석] 갑은 각기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한 국가나 사회 안에서 어떤 위계질서도 없이 각자 자신의 생활 방식을 추구하며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 샐

러드 볼 모형을 주장하는 반면 을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한 국가나 사회 안에서 공존할 수는 있으나 그 공존에는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의 위계질서가 존재해야 한다고 보는 국수 대접 모형을 주장하고 있다.

[선지 분석] ㄱ. 샐러드 볼 모형은 다양한 문화가 서로 대등하게, 즉 위계질서 없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ㄴ. 용광로 모형에 대비되는 국수 대접 모형은 외부 문화가 기존 문화에 동화되지 않더라도 한 국가나 사회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다양한 문화들이 주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샐러드 볼 모형 역시 동의할 내용이다.

ㄷ. 국수 대접 모형만이 동의할 진술이다.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 간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 사이의 위계질서를 전제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ㄹ.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은 샐러드 볼 모형과 국수 대접 모형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두 모형 모두 다양한 문화들의 공존과 조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13.

14. 직업에 대한 공자와 순자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①

[제시문 분석] 갑은 정명(正名) 사상을 통해 자신의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강조한 공자다. 을은 성왕이 제정한 예(禮)를 기준으로 직무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 순자다.

[선지 분석] ① 공자는 능력에 따른 분업을 강조했다. 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분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자는 자신이 맡은 직분에만 능통하면 된다고 본다. 즉 다스리는 사람은 다스리는 일에만,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짓는 일에만 능통하면 된다.

② 공자는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임했을 때 이상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공자에서 시작되어 유학의 근본적인 이념이 된 정명(定名) 사상이다.

③ 순자는 특히 신분이 혈연을 통해 세습되는 것에 반대했다. 그는 세습이 아니라 후천적 노력을 통해 각자가 예(禮)에 합치된 정도에 따라, 즉 덕과 능력에 따라 직분이 나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④ 순자가 바라본 인간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악한 본성을 가진 존재다. 그는 따라서 외면적 사회 규범, 즉 예(禮)를 통해 욕망을 절제해야 직분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공자와 순자는 모두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부합하는 도리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부합하게끔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곧 공자의 주장한 정명(正名)이다. 순자는 공자의 유학을 계승한 사상가로 공자의 정명론을 그대로 따랐다. 이는 모든 유학 사상가들의 공통점이다.

[심화 주제 분석] 유교 사상가들의 직업관 정리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직업과 청렴의 윤리 단원에 순자의 입장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이번 9월 평가원에서 이례적으로 유교 사상가간의 제시문을 구분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번에는 유교의 공통 입장만으로도 답을 구할 수 있게끔 출제되었으나, 유교 사상가의 제시문을 구분하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출제된 이상, 각 사상가별 입장을 확실히 정리해두어야 한다. 특히 공자와 순자, 맹자와 순자의 입장을 비교하는 문제는 윤리와사상의 빈출 유형이다. 이미 선례가 많은 유형이니만큼, 윤리와사상 기출 제시문을 토대로 각 사상가별 공통점과 특징들을 정리해두자.

공자는 유교의 시조로, 맹자와 순자가 그의 입장을 계승했다. 따라서 공자의 입장이 곧 유교 사상가의 공통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

공자는 분업을 전제로 한다. 분업을 지지하는 주장의 사상적 배경은 정명(正名)이다. 이는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에게 걸맞은 행동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배자라고 하여 모든 분야에 능통할 필요는 없다. 지배자의 역할은 백성들이 각자의 직업에 충실하게끔 이끌어주는, 즉 정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가 실현된 사회가 이상 사회이다.

제가 보기에 군주는 군주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합니다. 이것을 정명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의 방법입니다. 국정을 관장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정명입니다. 즉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등급과 신분을 분명히 알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서 결코 명분에서 벗어나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하는 곧 크게 어지러워지고 맙니다. **- 공자, 『논어』**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구체화시켰다. 우선 맹자는 사람을 덕성의 유무에 따라 대인과 소인으로 구분하였다. 맹자는 공자의 정명 사상을 계승했기 때문에, 대인과 소인의 직업 또한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대인은 정신 노동에 종사하는 노심자(勞心者)가 되어 다른 백성들을 다스린다. 소인은 대다수의 일반 백성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노력자(勞力者)가 되어 노심자의 지배를 받는다.

노심자의 의무는 노력자의 직업과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노력자, 즉 일반 백성들은 생계가 안정되지 않으면 도덕심을 유지하기 어렵다[無恒産, 無恒心]. 따라서 통치자는 백성의 생계를 보장함으써 도덕적인 사회를 유지해야 한다.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가지는 것은 오직 선비라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백성에게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게 되니, 진실로 항심이 없으면 방탕하고 편벽되고 사특하고 사치스럽게 되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죄악에 빠진 다음에 쫓아가 벌을 주는 것은 백성을 그물로 쳐서 잡는 것과 같으니, 인정을 베풀고자 하는 임금이 어찌 그물을 쳐서 백성을 잡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훌륭한 임금은 백성의 항산을 제정하되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길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부양할 수 있게 하여 풍년에는 종신토록 배부르게 먹고 흉년에는 굶어 죽지 않게 해야 합니다. **- 맹자, 『맹자』**

노심자의 의무는 세금 납부 등의 방식으로 노력자를 먹여살리는 것이다. 이처럼 노심자와 노력자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단, 이것이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가치가 동등하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육체노동이 정신노동보다 우월하지는 않은 것은 자명하나, 정신노동이 육체노동에 비해 우월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으로 기출이 된 바 없으니 참고하자.)

순자 또한 공자의 입장을 계승하여, 능력에 따라 직업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순자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직업을 사(士), 농(農), 공(工), 상(商)으로 나누었다. 예(禮)에 뛰어난 사람이 사(士) 계층이 되고, 다른 계층을 다스리게 된다.

농군은 밭일에 정통하지만 농사일을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 없고, 상인은 장사하는 일에 정통하지만 장사하는 일을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 없으며, 공인은 그릇을 만드는 일에 정통하지만 그릇을 만드는 일을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 없다. 여기 한 사람이 있어 이상 세 가지 일 중 어느 하나도 하지 못하지만, 이들 세 가지 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그가 도에 정통했기 때문이며, 사물에 정통했기 때문이다. 사물에 정통한 사람은 사물을 사물대로 잘 처리하고, 도에 정통한 사람은 사물을 사물대로 잘 아울러 이해한다.

- 순자, 『순자 - 왕제편』

순자는 인간이 이기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직업과 그에 따른 보수를 규정해두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보았다. 직업을 나누는 기준이 예(禮)인데, 이는 이기적 본성을 극복하고 덕성을 쌓은 사람이 후천적으로 제정한 기준이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욕망이 있는데, 바라면서도 얻지 못하면 곧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추구함에 일정한 기준과 한계가 없으면 곧 다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투면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우면 궁해진다. 선왕이 그 어지러움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예의를 제정하여 이들의 분계를 제정해서,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한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주었다.

- 순자, 『순자 - 성악편』

세력과 지위가 같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바가 같으면 물자의 부족으로 서로 싸울 것이요, 싸우면 혼란해지고 혼란해지면 결국 막히게 된다. 선왕은 싸움과 혼란을 혐오하였으므로 예의를 제정하여 분별하였고 빈부 귀천을 두고 서로 부리게 하였다.

- 순자, 『순자 - 왕제편』

순자 또한 덕성에 따라 직업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사상가들에 비해 후천적 노력을 강조하는 편이다. 직업과 계층의 세습에 반대하고, 예에 출중하다면 농부의 자식도 선비가 되어 다른 백성들을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5. 형벌에 관한 루소, 베카리아, 칸트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②

[제시문 분석] 갑은 사회 계약의 사회 방위론적 차원에서 사형에 찬성하는 루소, 을은

사회 계약에 근거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 계약 과정에서 생명권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의 범죄 억제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베카리아, 병은 응보론의 관점에서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에 대한 사형에 찬성하는 칸트이다.

[선지 분석] ① 루소는 살인범은 '사회 계약'의 위반자로, 스스로가 사회 구성원이 아님을 입증한 자로 본다.

② 베카리아는 사형이 아니라 종신 노역형이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가장 큰 공포감을 주는 형벌이라 본다. 그는 그러므로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더욱 크다고 주장한다.

③ 칸트는 사형은 살인범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형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살인이라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살인범에게 사형이라는 응보적 형벌을 내림으로써 그가 자신이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④ 루소와 베카리아 모두 범죄에 대한 형벌을 사회 계약론의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⑤ 베카리아와 칸트 모두 형벌이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의 원리'에는 차이가 있다. 베카리아는 공리주의 사상가로서 공리의 원리를 정의의 원리로 파악하지만, 칸트는 의무론자로서 응보적 도덕 법칙을 정의의 원리로 파악한다.

16. 밀의 자유주의 사상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 정답 ⑤

[제시문 분석] 갑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를 보편적 도덕 원리로 제시하는 공리주의 사상가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유주의 사상가인 밀이다.

[선지 분석] ① 밀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자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② 밀은 유용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공리의 원리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도덕 원리라고 본다.

③ 밀은 행위의 도덕성은 그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④ 밀은 개인의 자유는 타인과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만 절대적으로 보장될 수 있으며 그 한계를 넘어서는 자유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본다.

⑤ 밀은 유용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공리의 원리를 보편적 도덕 원리로 제시하면서 쾌락을 증진하는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간주하였다.

17. 롤스와 싱어의 해외 원조 이론 이해하기 정답 ⑤

[제시문 분석] 갑은 원조의 목적이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로 편입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본 롤스, 을은 원조의 목적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늘리는 데 있다고 본 싱어이다.

[심화 주제 분석] 롤스가 말하는 "그 사회가 스스로 미래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돕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 사회가 스스로**

미래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원조의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롤스,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롤스가 "고통받는 사회가 스스로 미래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원조의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이 제시문에서 우리가 챙겨가야 하는 개념은 무엇일까?

고통받는 사회에 대한 원조는 도덕적 의무이지만,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의 주장에서 핵심적인 것은 의무적 원조보다는 원조의 범위 내지 목적의 문제이다.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정일운 사회 구조를 만들지 못해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가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 구조를 만듦**으로써 만민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조는 정의로운 사회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정치적 차원의 것이 되어야 한다. **-신지선, 「『만민법』의 도덕교육적 함의」**

롤스에 따르면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되는 것은 정치 및 사회 제도의 결함에 있지만, 원조는 **질서 정연한 사회의 결함이 없는 제도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 사회에 합류할 의지가 있는 **고통받는 사회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극복하고** 만민 사회와의 우호적 협력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는 인권의 초국가적인 힘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지선, 「『만민법』의 도덕교육적 함의」**

1. 고통받는 사회가 스스로 미래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은, 그 사회가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2. 고통받는 사회가 스스로 미래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은,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적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로도 해석 가능하다.

[선지 분석] ㄱ. 롤스의 사상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원칙은 차등의 원칙이다. 그런데 롤스는 해외 원조가 이루어지는 국제 관계에는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므로 롤스의 이론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원칙은 원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심화 주제 분석] 롤스와 싱어가 생각하는 원조의 근거

싱어가 생각하는 해외 원조의 근거가 전체 인류의 차원에서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여야 한다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공리의 원리임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롤스가 생각하는 해외 원조의 근거는 무엇일까?

롤스의 만민법은 크게 이상적 이론과 비이상적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적 이론은 자유적 만민과 비자유적이지만 적정 수준의 위계적 만민, 이렇게 두 협력적 만민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해외 원조는 비이상적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다. 비이상적 이론 역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 간 협력을 거부하고 부정의한 전쟁을 수행하는 무법국가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협력 자체를 할 수 없는 고통받는 사회가 이에 해당한다.

고통받는 사회에 관련한 핵심은 이상적 만민이 지는 도덕적 의무로서의 '원조의 의무'이다. 즉 **원조 의무는 만민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참고/인용 자료: 『만민법』 부록, 옮김이 해제)

ㄴ. 롤스는 천연자원이 부족한 빈곤국도 원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본다. 애당초 롤스의 해외 원조 이론에서 원조 대상은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 중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빈곤국도 성숙한 정치 문화를 바탕으로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에 편입되어 있다면 원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다.

ㄷ. 롤스가 말하는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는 곧 자유와 평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사회를 말한다. 그러므로 롤스가 제시하는 원조의 목적, 즉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변화시키는 것은 자유와 평등의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사회에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ㄹ. 싱어는 원조 주체의 과도한 희생이 없는 한에서 해외 원조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른 것인데, 원조 주체와 원조 대상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원조로 인해 원조 주체가 과도한 희생을 하게 된다면 원조의 결과 오히려 전체의 효용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조 주체는 원조 시 원조 대상의 이익뿐 아니라 자신의 이익도 세심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18. 도가와 불교의 죽음관 이해하기 정답 ④

[제시문 분석] (가)는 죽음을 애통해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도의 본성을 배반하는 것으로 보는 도가, (나)는 만물의 상호 의존 관계를 깨닫고 생사가 끝없이 반복되는 윤회의 굴레를 끊어야 한다는 불교이다. 도가에서는 삶과 죽음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본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본래 모습인 불성(佛性)을 깨달음으로써 끝없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불교에서는 생로병사(生老病死)를 깨달음을 통해 벗어나야 할 고통으로 본다.

[선지 분석] ① 죽음을 윤회(輪廻)의 과정으로 본 것은 도가가 아니라 불교의 입장이다. 도가에서는 죽음을 기(氣)가 순환하는 과정의 일부, 즉 기가 흩어지는 현상이라고 본다.

② 도가에서는 죽음이 기의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 중 일부일 뿐이므로 죽음을 애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③ 죽음을 기(氣)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본 것은 도가의 입장이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윤회의 과정 중 일부라고 본다.

④ 불교에서는 생로병사(生老病死)를 모두 고통으로 보아, 깨달음을 통해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윤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⑤ 도가와 불교 모두 죽음을 인간 삶에서 벗어난 지극한 경지라고 보지 않는다.

19.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사상 이해하기 정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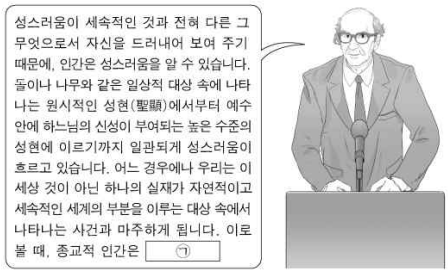
[제시문 분석] 그림의 강연자는 이성적 존재자들이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실현된 담론을 통해 보편적 규범에 합의할 수 있다고 보는 담론 윤리 사상가 하버마스이다.

[심화 주제 분석]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심화

9월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이다. 이중, 출제 비중이 낮은 사상가의 입장이 강연 유형으로 출제될 때는 특히 주의 깊게 체크해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제시문은 연계교재를 기반으로 한 심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고, 제시문과 선지의 내용이 수능에 그대로 반영되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쉽게 틀릴 수 있도록 출제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작년 9평과 수능에 출제된 엘리아데 문항이다.

20. 그림은 어느 사상가의 강연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성스러움이 드러난 돌이나 나무 자체를 신으로 받아들입니다.
②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이 단절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③ 세속의 세계 안에서 성현을 체험하며 그에 따라 살고자 합니다.
④ 세속적인 삶에서 언제든지 성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⑤ 세속의 세계를 성스럽게 만드는 거룩한 존재가 있다고 믿습니다.

-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문항

2.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거룩한 것의 총체이다. 종교의 역사는 성현(聖顯)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적 인간은 우리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어떤 실재가 자연의 대상 속에서 현현(顯現)되는 사건에 마주칠 때, 예컨대 한 그루 나무를 우주적 생명의 이미지로서 접할 때 최고의 정신성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 달리 비종교적 인간은 초월을 거부하는 인간 실존의 탈신성화 과정의 결과이다.

① 비종교적 인간도 세계를 성(聖)의 드러남으로 인정한다.
② 성(聖)이 현현되는 이 세계는 초월적 존재 그 자체이다.
③ 인간은 체험이 아니라 상상을 통해서 성(聖)을 만나게 된다.
④ 어떤 인간도 현실의 삶 속에서 최고의 정신성에 도달할 수 없다.
⑤ 인간이 성(聖)을 알 수 있는 것은 자연물에 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 2020학년도 대수능 20번 문항

기존의 평가원 기출을 살펴보면, 종교에 대한 엘리야데의 입장은 출제되지 않거나, 제시문 독해만으로도 평이하게 풀릴 수 있게끔 출제하는 등 비중이 낮았다. 그러나 작년 2020학년도 9평에서 강연자 유형으로 출제된 뒤, 수능에서 3점짜리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

한 번이라도 엘리야데의 입장을 정리해 둔 적이 있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고를 수 있었겠으나, 제시문 독해만으로 풀리던 기존의 평이한 난이도를 예상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소요했을 것이다.

또한, 하버마스의 분량이 이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지난 교육과정에서 2단원의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중 하나로 소개되던 담론 윤리는, 이번 교육과정에서 14단원 <갈등 해결과 소통, 민족 통합의 윤리>에서 비중 있는 이론으로 다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수능에서는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가 단독 입장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지금까지 하버마스의 담론윤리는 별다른 개념적 지식 없이도 독해로 풀 수 있는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하지만 이번 수능에서는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출제될 것으로 보이며, 제시문 독해를 믿고 안일하게 공부했다가는 시험장에서 헤맬 수 있다.

최소한 이번 17번 문제에 제시된 내용만큼은 이 자료를 통해 정리하고 넘어가자.
17번 문제에서 직·간접적으로 제시된 하버마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의 이성만으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본 기존 윤리의 대척점에 있다.
(2) 공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이해 당사자 모두의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
(2)-1. 이때 당사자들은 이성적으로 보편화 가능한 도덕 규범에 합의할 수 있다.
(2)-2. 하버마스는 이성의 도구적 측면이 아닌, '합리적 의사소통'적 측면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3) 행위 규범의 정당화 조건: 모든 당사자들이 담론(비판과 논증)을 통해 동의할 수 있는 행위 규범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3)-1. 당사자들의 합의는 타당한 규범에 따를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을 모두 숙지한 상태임을 전제로 한다.
(3)-2. 대다수의 합의, 즉 다수결에 의한 합의는 정당화될 수 없다. (다수결은 대표적인 효율적 처리 방식이다. 하버마스는 현재 사회가 효율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담론윤리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끔 한다. 효율성과 합리성을 햇갈리지 말자.)
(4) 의사소통은 행위자들이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서로의 행위 계획을 조정하는 행위이다.
(5) 담론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주관적 견해, 타인의 의견에 대한 비판 등이 표현된다.

이상적 대화 상황의 조건 : 자신의 주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바람, 욕구 등도 표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권리들을 행사할 때 내부나 외부의 강요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다.

-하버마스, 『담론 윤리의 해명』-

오늘날 시민들은 공적 장소에서 토론할 기회를 제대로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적 토론이 시민들에게 권장되지도 않는다. 시민들 간의 합리적 의사소통이 없으면 건강한 민주 사회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에 의해 공적 문데에 대한 문제 제기와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민주적

공론장에서 이성적인 시민들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논증의 형태로 대화에 참가하고, 그 토론의 결과가 법체계에 반영된다면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치적·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선지 분석] ① 하버마스는 담론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 자신의 주장을 논증할 수 있어야 올바른 규범이 도출된다고 본다.
② 하버마스는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견을 자유롭게 비판하고 거부할 수 있다고 본다.
③ 하버마스는 이상적 담론 상황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거리낌 없이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주관적 견해는 표현의 대상이지 극복의 대상이 아니다.
④ 하버마스는 타당한 규범은 다수결이 아니라 담론 참여자들의 만장일치에 의해 도출된다고 본다.
⑤ 하버마스는 담론 상황에서 상호 인정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나와 완전히 동일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20. 롤스와 노직의 분배 정의론 이해하기 정답 ④

[제시문 분석] 갑은 원초적 입장에서 만장일치로 도출된 정의의 원칙을 따를 때 공정한 분배가 실현된다고 본 롤스, 을은 롤스가 주장하는 차등의 원칙과 같은 분배의 '정형적 원리'는 필연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낳는 부정의를 유발한다고 비판하며 정당한 노동을 통한 재화의 최초 취득과 자유 의사에 의한 재화의 이전, 그리고 부정의를 교정하는 교정의 원리를 통해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본 노직이다.
[선지 분석] ㄱ. 롤스는 사유 재산 소유권 등의 여러 가지 기본적 자유들은 정의의 제1 원칙에 의해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차등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정의의 원칙이 축차적 서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 롤스에 따르면 제1 원칙은 제2 원칙에 우선하므로 제2 원칙인 차등의 원칙은 제1 원칙에 의해 보장된 기본적 자유인 사유 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다.
[심화 주제 분석] 롤스가 제시하는 기본적 자유의 제한 조건

1. 수능특강 및 수능완성의 내용

현재 수능연계 교재에 실려 있는 내용을 확인해보면, 올해 수능특강 78p와 수능완성 45p에서는 롤스의 정의의 제1 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라고 서술되어 있고,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편성될 때 정당화된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기회균등의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2. 정의의 원칙의 순차적 서열

분배 정의의 원칙들은 순차적 서열로 이뤄져야 하고,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덜 광범위한 자유는 모든 이에 의해 공유된 자유의 전체 체계를 강화해야만 하

고, 덜 평등한 자유는 더 작은 자유를 가진 이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만 한다.

- 수능완성 52p 9번 문항 병(롤스) 제시문

제1 원칙에 의해 포괄되는 기본적 권리들 및 자유들은 사회·경제적 이익과 교환되는 것을 배제한다. 이때 사회 경제적 이익은 차등의 원칙에 의해 규제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우선 (1) 롤스가 말하는 기본적 자유는 더 큰 자유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과 (2) 제1 원칙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적 자유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위해 제한될 수 없으며, 사회 경제적 이익은 사회적 자원의 분배 문제를 담당하는 제2 원칙 중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 규제됨을 알 수 있다.

3.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의 서술

'기본적 자유의 제한'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의 「철학사상」 별책 제5권 제14호를 통해 롤스의 『정의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참고/인용 자료: '정의론'의 해제와 그 원문(장동익 저),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의 '철학사상' 별책 제5권 제14호)

(1) 1.1.5.2.4 기본적 자유들의 목록

- (e1.1.5.2.4.1)정의의 두 원칙 중 제1 원칙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 자유를 동등하게 누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자유의 목록은 정치적 자유, 언론과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인신의 자유, 재산 소유의 자유,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등이다.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했을 때, 제1 원칙의 자유 목록은 보통 소극적 권리라고 말하는 것들의 일종이다. 소극적 자유는 적극적 행동을 통해 자신이 얻어내는 권리와는 달리,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 (e1.1.5.2.4.2) 롤스가 제시한 기본적 자유의 목록에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의 권리를 인정하느냐의 여부는 정치적 정체의 성격을 드러내 준다. 즉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주의 체제에 가깝게 된다. 롤스가 기본적 자유의 항목에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의 권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특정하게 구성된 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가 부정의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의 자유를 그 사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로 남겨두고 있다.

- (q1.1.5.2.4.3)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중대한 것은 기본적 자유들이 이러한 자유들에 대한 목록으로 주어진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정치적 자유(투표의 자유와 공직을 가질 자유)와 언론과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심리적 억압과 신체적 폭행 및 절단을 포함하는 인신의 자유(인신의 온전성),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와 법의 지배라는 개념이 규정하는 이유 없는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이와 같은 자유들은 제1 원칙에 의거해서 평등해야 한다.

(2) 자유의 권리가 제한되는 조건

- (e1.5.6.3.2.1) 롤스는 자유의 우선성을 주장하며, 자유의 권리는 사회의 전체적인 보다 큰 선을 위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유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제한은 평등한 자유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게 될 때를 위해 마련된 장치이다. 따라서 자유의 제한은 모든 사람이 향유하는 전체적인 자유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된다. (수능완성 52p 9번 문항 병 제시문의 내용과 일맥상통)

- (q1.5.6.3.2.2) 사람들이 권리들의 제한을 용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회적 여건이 이러한 제반 권리들의 효과적인 확립을 허용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이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제한은 그것들이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을 때를 위한 길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까지만 인정될 수 있다. 평등한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한 과정을 거쳐 그러한 자유가 향유될 수 있도록 문명의 수준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옹호될 수 있다. 그래서 두 원칙의 서열적 순서를 택하는데 당사자들은 그들 사회의 조건이, 그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평등한 자유의 실질적 실현을 허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4. 결론

즉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볼 때, 일반적인 '자유'와 달리 자유와 권리 중에서도 제한 가능한 자유와 권리가 있고, 일반적 '자유'와 '침해받지 않아야 할 기본적 자유'에 대한 구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롤스의 경우 '생산 수단의 소유 권리'는 일종의 권리이긴 하나 '제한될 수 없는 권리'는 아닌, 정의의 원칙에 따라 제한 가능한 권리인 것이다. 그냥 '자유'가 아니라 '기본적 자유'는 정의의 원칙 중 제1 원칙에 의해 규제되며 이는 사회·경제적 이익과 교환되지 않기에 사회적 자원의 분배를 담당하는 제2 원칙 중 차등에 원칙에 의해서는 제한받을 수 없다. 또한 제1 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더 큰 자유를 위한 경우에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가하다.

ㄴ. 노직은 정의의 원칙에 따른 분배와 같이 정형적 원리에 따른 분배가 필연적으로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적 재분배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정형적 분배 원리를 비판한다.

ㄷ. 노직은 자신의 정당한 노동에 의해 소유하게 된 물건뿐 아니라 정당한 노동으로 취득된 재화를 자유롭게 이전받은 경우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정당한 소유권을 갖는다고 보았다.

ㄹ. 롤스와 노직 모두 개인이 정당하게 소유한 소유물에 대해서는 그 개인이 배타적 사용권을 지님을 인정한다. 롤스가 볼 때 정당한 소유물이란 정의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당연한 몫을 할당받은 것을 말하고, 노직이 볼 때 정당한 소유물이란 정당한 최초 취득(정당한 노동)과 자유로운 양도(정당한 이전)에 의해 얻게 된 것을 말한다.

[심화 주제 분석] 노직과 롤스의 '배타적' 사용권 개념

노직의 정의의 원리에 관한 추가적 설명

노직은 자유 지상주의에 입각하여,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서 보장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노직이 정당한 소유물, 소유권이라고 판단

하는 더욱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노직의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정당한 최초 취득의 원칙 / 정당한 양도의 원칙 / 시정(교정)의 원칙
이에 관해서는 2009년 교육과정에서 발간된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만일, 현재의 소유 상태가 이 세 가지 원칙을 어기지 않았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소유 상태로 여겨진다. 가령, 인류 역사가 시작될 즈음 모든 것에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떤 대상물에 자신의 노동을 가하여 최초로 사유 재산으로 삼았다면 그러한 소유 상태는 정당하다(정당한 최초 취득 원칙), 그리고 교환이나 증여, 상속 등에서 속임수가 없었다면 그 결과로 발생하는 소유 역시 정당하다(정당한 양도의 원칙).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부정의가 있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시정의 원칙). **- 2009 교육과정 윤리와 사상 천재교육 교과서**

먼저, 노직은 최초의 대상물에 노동을 더하여 개인의 소유물로 획득하는 과정과 그 소유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전하는 과정 자체를 정의롭다고 보았다. 다만 개인이 어떤 사물을 사유화할 때에는 다른 이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 예컨대, 마을 사람 모두의 생존이 달린 우물을 개인이 소유하여 혼자만 사용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므로 옳지 않다.
- 2009 교육과정 윤리와 사상 금성출판사 교과서

노직에 의하면, 최초의 소유권을 규정하는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는 소유되지 않은 대상물에 자신의 노동을 가함으로써 가치가 발생했을 때 정당한 소유권이 발생함을 주장한다. 이때 타인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같은 품질의 좋은 것이 남겨질 수 있어야 하고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최초의 소유자가 너무 많은 것을 차지한다면 그 이후의 사람에게 돌아갈 기회가 제한되어 타인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즉 개인 간의 자발적인 교환에 의하여 소유권이 발생한다. 개인의 사적 소유권은 그 최초의 획득과 그 이전 과정이 정의로웠다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정당하다. **- 2009 교육과정 윤리와 사상 교학사 교과서**

따라서 노직의 입장에서는 우선 어떤 것이 소유자가 없고, 자신의 노동이 투여되면서도 다른 사람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정당한 최초 취득의 원칙'과, 이를 전제로 하는 '정당한 양도(이전)의 원칙', '교정(시정)의 원칙'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짐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소유권은 배타적이고 절대적이라고 본다.

선지에서는 배타적 '사용권'을 말하고 있는데 왜 여태껏 열심히 배타적 '소유권'에 대해서 설명한 것일까? 그것은 배타적 소유권이 배타적 사용권을 낳기 때문이다. 어떤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이 내게 있다면, 나는 특수한 경우(그 소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거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유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를 지니기 마련이다.

이는 롤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롤스 역시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서는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볼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다만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규정이 노직의 규정과 다를 뿐이다. 롤스의 입장에서 정당한 소유물이란 정의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당연한 몫을 할당받은 것을 말하는데, 그 이후 가지게 된 소유물은 정의의 원칙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재분배의 대상이 아니다.

21.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입장 비교 정답 ③

[제시문 분석] 갑과 을 모두 인권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라는 점과 현재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또한 둘 모두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국제 사회의 여론이 악하되고 남북 관계 역시 악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하지만 갑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을은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강조하며 외부적 힘의 개입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선지 분석] ① 인간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즉 인권을 지닌다는 데는 갑과 을이 의견을 같이한다.

② 북한 주민들이 현재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갑과 을이 의견을 같이한다.

③ 갑은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 사회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반해, 을은 그러한 외부적 개입이 낳을 또 다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다.

④ 북한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시 국제 사회의 여론이 악화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는 갑과 을이 의견을 같이한다.

⑤ 갑과 을은 모두 북한이 스스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갑은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국제 사회의 적극적 개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22. 칸트와 갈퉁의 평화 사상 이해하기 정답 ④

[제시문 분석] 갑은 공화 정체를 확립한 국가들의 연맹 체제를 바탕으로 영구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보는 칸트, 을은 폭력의 개념을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으로, 평화의 개념은 소극적 평화와 직접적 평화로 나눔으로써 폭력과 평화의 개념을 과거보다 더욱 확장한 갈퉁이다.

[선지 분석] ㄱ. 칸트의 세계 시민법에 따르면 평화롭게 처신하는 이방인은 우호적으로 환대해야 한다.

ㄴ. 칸트는 각 국가의 주권은 절대 침해받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칸트가 제시

하는 국제 평화 연맹 역시 주권을 지닌 개별 국가들의 모임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개별 국가의 주권 위에 군림하는 또 다른 주권을 지니지는 못한다. 그래서 칸트는 세계 공화국이나 세계 정부의 개념을 거부한다.

ㄷ. 갈퉁은 소극적 평화는 현재 폭력의 제거를 추구하고, 적극적 평화는 미래 폭력의 예방을 추구한다고 본다. 폭력의 예방이 적극적 평화 실현의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이다.

ㄹ. 칸트는 공화 정체로 이루어진 국가들의 국제 평화 연맹을 통해 전쟁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전쟁의 종식을 이루어야 진정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단지 전쟁의 유보나 일시적 휴전 협정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갈퉁은 전쟁이나 테러 등의 직접적 폭력의 제거와 빈곤, 기아, 인권 침해 등의 간접적 폭력의 제거가 진정한 평화 실현의 필요 조건이라고 본다.

[심화 주제 분석] '모든 전쟁의 종식'을 바라보는 칸트와 갈퉁의 관점

ㄹ 선지를 변형해 보자.

"ㄹ. 칸트, 갈퉁: 모든 전쟁의 종식은 진정한 평화 실현의 충분한 조건이다."

이는 모든 전쟁이 종식되면 그것만으로 진정한 평화가 이뤄지는 것인지 묻는 선지다. 갈퉁의 입장은 당연히 '부정'이다. 그는 전쟁 등의 물리적 폭력이 사라졌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칸트는 어떨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별한 종류의 연맹이 있어야만 한다. 그것은 평화 연맹(foedus pacificum)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평화 조약(pactum pacis)과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후자는 단지 그때그때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인 반면, 전자는 **영원히 모든 전쟁의 종식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 칸트, 『영구 평화론』**

칸트의 영구 평화 이론에서 칸트의 관심사는 오직 모든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식하는 데 있으며, 이 이상의 평화 개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국제법과 세계 시민법, 그리고 국제적 평화 연맹 따위의 것들은 모두 이 땅에서 전쟁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기 위한 것들이다. 칸트는 평화 개념을 딱 이 정도로만 언급하므로, 갈퉁과 달리 칸트는 모든 전쟁의 종식을 진정한 평화 실현의 충분한 조건으로 보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칸트는 전쟁이나 적대 행위의 일시적 중단을 진정한 평화 상태라고 보지는 않는다. '종식'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일시적 중단이 아니라 영구적 중단, 혹은 영구적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모든 전쟁의 종식'이라는 표현은 현재의 적대 행위나 전쟁뿐 아니라 미래의 적대 행위나 전쟁까지도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